

자유기업원	보 도 자 료		www.cfe.org
보 도 일 시	즉 시	배 포 날 짜	2025년 5월 19일
담 당 자	· 자유기업원 안향아 연구원 · 02) 3774-5000 · aha@cfe.org		

3040세대가 새정부에 바란다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 반도체·통상·저출산·노동 등 각 분야 3030전문가 그룹 새정부 정책제안
- 새정부에 국가 개입이 아닌 민간 자율, 유연한 시스템 개혁 제안

3040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결성된 넥서스포럼이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국가 개입이 아니라 민간 자율, 경직된 제도가 아니라 유연한 시스템”이라는 새정부에 핵심메시지를 전했다.



자유기업원과 넥서스포럼은 5월 19일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 ‘새정부에 바란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트럼프 관세전쟁과 한국정부 및 기업 대응방안,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대응, △공장노동법의 현대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각 세션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서정훈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AI시대 국가경쟁력은 산업의 석유인 반도체에 달려 있으며, 특히 시스템반도체의 기술력 열세가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R&D전문인력 주 52시간제 유예,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공장용적률 상향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채상미 교수(이화여대)는 “반도체에서 AI서비스 생태계로 논의의 초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I산업의 부가가치는 생성형 AI, SaaS, AI 플랫폼 등 서비스 영역에 있으며, 데이터 허브 구축이 선결 과제”라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김민균 교수(서강대학교)는 “생산기지 다변화, 고부가가치 중심 전환, 리쇼어링 등 기업 차원의 전략과 더불어, 정부는 실용적인 무역외교와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근우 연구위원(NH 미래전략연구소)은 “한국은 아직까지 통상 안보 리스크에 대응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경제안보기본법 제정과 보복 관세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공동 로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교수(KAIST)는 저출산 문제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하며,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금성 지원보다는 양성평등 실현, 노동 유연성 확보, 돌봄 인프라 강화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혜림 선임연구원(자유기업원)은 “다양한 근로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유연성과 선택권 보장이 중요하다”며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표에서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현행 노동법은 공장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디지털·AI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

다”며, “‘반도체특별법’ 등 산업별 주52시간 예외 적용 방식의 한시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탈피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제도로의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세환 노무사(태광노무법인)는 노동개혁의 방향에 대해 “규제 완화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노사 간 협의를 통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특례업종 재정비는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제도와 규제를 정비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